

1. 생산성 향상 및 신산업 육성

- 재생에너지발전, 저장장치산업, 전기차산업, 그린수소경제, 생태농산어업이라는 5대 분야에서 우리 경제의 새로운 동력을 형성할 것임
- 이를 위해서 2030년 까지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을 전체 발전량의 50% 규모까지 늘리고 2023년부터 매년 40조원 규모의 에너지전환 투자를 할 것임
- 배터리산업을 대한민국의 대표 산업으로 발전 시킬 것임. 이를 위해서 배터리 신소재 개발과 효율화·상용화를 적극 지원할 것임. 또한, 재생에너지의 간헐성 극복에 필수적인 저장장치산업에도 대규모 투자를 하겠음. 이 과정에서 혁신형 중소기업의 참여를 도와, 우리 배터리산업을 제2의 반도체, 대한민국 대표산업으로 발전시킬 것임
- 세계 5위의 우리 자동차 산업은 전기차 산업으로 대전환 할 것임. 동남권 주력산업인 승용차는 물론 전북지역 주력인 상용차의 전기화를 앞당길 것임. 전기차 전환은 필연적으로 내연기관 관련 부품사와 협력사, 주유소와 카센터 등 연관 산업의 쇠퇴와 일자리 문제를 불러옴. 대기업과 더불어 혁신적 중소기업의 컨소시엄이 전기차 산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임. 녹색 전환을 위해, 탄소산업 노동자와 사회적 대화부터 나설 것입니다. 노동자 재교육, 이직과 전직 지원, 소득 보장 등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펼쳐 <정의로운 전환>을 도모할 것임.
- 우리 경제의 산업공정(process)을 녹색으로 바꿀 것임. 제철, 석유화학, 시멘트 산업의 공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을 줄이는 데 수소를 적극 활용할 것입니다. 특히 코크스를 대체하는 수소 환원제 개발을 대폭 지원해, 연간 1억톤 규모인 제철산업의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일 것임.

2. 저출산 문제

- (저출생 원인의 진단) 저출생의 원인으로 노동시장 격차와 불안정 고용증가, 교육에서의 경쟁 심화와 결혼 출산을 가로막는 주택가격, 성차별적 노동시장 돌봄 공백 등을 들 수 있음. 결혼·출산·가족 등 삶의 양식을 둘러싼 시대의 변화, 청년 가치관 변화, 생애 경로 및 삶의 질에 대한 젠더적 접근 강화 또한 반영해 나가야 함. 그 중에서도 성평등 돌봄,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제도 정비, 보육 격차 해소를 위한 방안을 들겠음.

1) 전국민육아휴직제도 도입, 성평등 돌봄 실현

- ①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 80%(상한 285만원으로 상향)으로 1년간 지급(부모 합산 2년),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규정 삭제(육아휴직의 급여를 복귀 후 25% 지급하는 규정)로 실질적 소득 보장
- ② 대체인력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대체인력 노동자 평등수당(1.5배) 지급
 - 중소기업 대체인력 지원 위한 대체인력지원센터 설립
 - 대체인력 노동자(기간제 노동자)에게 '평등수당(1.5배)'를 도입하여 소득보장
- ③ 성평등한 돌봄, 사내 눈치 없는 육아휴직 돌봄
 - 아빠 육아휴직 3개월 할당제 실시, 근로시간단축제도 3년까지 분할
 - 배우자 출산휴가 유급 10일 → 30일로 확대 *세종대왕의 노비 출산휴가제도: 출산전후 휴가시 100일 휴가, 남편 노비도 30일 출산 휴가 제공
 - 출산전후 휴가 90일 → 120일로 확대, 연계 자동육아휴직제도 법제화
- ④ 사각지대 없는 육아휴직, 육아휴직 사용의 보편적 권리 보장
 - 전국민고용보험제 도입과 연동하여 특수고용, 플랫폼, 자영업자 등 육아휴직 대상으로 포함하고 고용보험기금에 대한 일반 회계 부담비율 확대, 국가 책임 강화
 - 한부모가족 더블돌봄휴가제 도입
- ⑤ 기업의 책임강화 및 불이익 방지
 - 육아에 대해 불이익을 주는 기업(사업주)에 대해 남녀고용평등법에 구제 명령조항 신설, 육아휴직 등의 사유로 한 사업주의 부당 대우 및 차별적 처우를 받을 시 임금보전과 배상액 지급 명령(육아휴직 등의 사유로 불이익 혹은 해고 처분을 받을 시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규정 법률 명시)
 - *남양유업의 경우, 육아휴직을 신청한 여성 근로자를 보직해임하고, 해당 근로자가 육아휴직 후 복귀하자 본래 하던 업무와 관련 없는 곳으로 발령을 낸 사실이 알려지면서 육아에 대한 불이익 사회적 이슈가 됨.
 - 육아휴직 등 법 준수 여부 감독 강화 및 위반, 반복시 가중처벌
 - 가족돌봄 휴직 부여 등에서 사업주가 거부 할 예외 조항 삭제

2) 노동시장의 성별임금격차 해소

- 성별임금격차해소법 제정
- 직종분리, 고용단절, 임원비율 등의 실태조사, 성별임금공시와 후속조치의 정부 책임 강화,

- 공시의무 미이행시 패널티 부과, 정부 컨트롤 타워 수립 등 명시
- 여성고용기준 미달기업 패널티 강화로 적극적고용개선조치 강화
- 채용 성차별 금지
- 성평등담당관 선출과 성차별 가이드라인 제시로 채용 성차별 예방
- 성차별 의심기관 불시 감독 및 제재 강화
- 채용 성차별 처벌로 법인에 대한 과태료 처분에서 사업주 형사처벌로 강화(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 검토)
- 채용기준과, 절차, 점수 등 채용의 전 과정의 투명한 공개

3) 국공립 50%, 교사처우 향상 등 보육 공공성 투트랙 실시

- 국공립어린이집을 50%로 확대하고 지역별 보육 격차 해소
- 국공립어린이집 비중 50%까지 확대
- 신축 지원단가를 실제 건축비 수준으로 인상
- 기자재 구입비 및 국공립시설 증개축비 인상
- 보육균형발전지표(차등보조율) 도입으로 지역별 국공립 격차 완화

- 보육교사 처우 개선 등 민간보육 공공성 강화
- 동네별로 국공립어린이집을 보육지원센터로 지정. 민간에 교재, 기자재 등 대여
- 부모, 교사 등이 공동의 조합원이 되는 협동조합 어린이집 지원 확대
-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방식을 쿠폰(바우처) 방식에서 시설 직접 교부로 전환
- 국공립 수준으로 보육교사 임금 인상 후 유치원 수준으로 단계적 인상
- 아동심리상담가가 어린이집을 정기 방문해 아동발달 교육, 상담, 보육환경 진단

3. 부동산 시장의 수급 균형과 부동산 가격의 연착륙

최근 우리나라의 부동산 가격이 급상승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2008년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전세계적인 대규모 양적완화로부터 촉발되고, COVID-19 감염병에 대처하기 위한 급격한 재정정책으로 더욱 심해진 유동자금 증가 및 금리 하락이다. 두번째 요인은 주택의 공급을 활성화하는데 실패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다. 거래세 인상, 재건축 억제 등으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자, 대출 규제 등 반복적인 수요억제 정책으로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려 시도하였지만, 공급이 부족한 시장에서 가격 상승을 막기는 어려웠다. 도

리어 수요억제 정책은 역진적 자산배분 효과를 유발하여 형평성마저 훼손하였다. 2021년 11월의 주택가격은 5년 전인 2016년 11월에 비하여 전국적으로 46.0% (KB 매매가격지수, 전국 종합), 서울 아파트만 보면 61.2% (KB 매매가격지수, 서울 아파트) 상승하였다. 이제 평균적인 근로자가 월급을 모아 집을 사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졌고, 자산 불평등이 심화되었으며, 세대간 갈등까지 발생하고 있다. 어떻게 해서든 부동산 시장의 수급을 정상화시켜 가격이 서서히 내려갈 수 있게 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가장 유의해야 할 점은 부동산 가격의 폭락이 폭등보다 더 무섭다는 사실이다. 만일 일본의 90년대 부동산 가격 폭락과 비슷한 사태가 발생한다면, 우리 경제에 치명적이고 장기적인 피해를 끼칠 수 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 부동산정책

체제전환 없는 단편적 정책으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건국 이후 수립된 구(舊)부동산 체제는 이제 시효를 다했습니다. 토지정책은 부재하고, 부동산 불로소득을 용인하며, 국가가 주택 보급을 이유로 땅장사·집장사를 하는 현재의 부동산 체제가 유지된다면, 우리 사회는 영원히 ‘부동산의 덫’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은 첫째, 국토의 효율적인 사용에 있어 새로운 규칙을 만들어야 하며 둘째, 둘째, 44% 집 없는 서민과 주거 약자들의 주거 안정과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부동산 정책의 제1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불로소득 환수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정의당은 신부동산체제 수립을 위한 3대 개혁과제, 주거안심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3대 개혁과제와 주거안심정책은 아래와 같습니다.

1) 新부동산체제 수립을 위한 3대 개혁

(1) ‘제2의 토지개혁’ 추진

- ① ‘토지초과이득세’ 도입 : 고유한 목적 없이 소유한 토지에 대해 지가 초과 상승분에 초과 50%를 중과세
- ② 토지 소유현황을 3년마다 정기적으로 공개 : 지자체가 법인과 개인이 보유한 모든 토지를 유희토지와 기타토지로 구분해 정리하고 국세청이 총괄 관리하는 ‘전국 토지자료체계’를 구축
- ③ 농지에 대한 투기 근절 : 비농업인의 농지 취득 및 소유를 원천 금지, 편법

소유와 경작을 막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농지 소유와 이용실태를 조사

(2)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

- ① 개발이익환수제도 강화 : 초과개발이익 50% 이상을 환수, 사업비 및 투자액 대비 상한제
- ② 주택소유상한제를 도입 : 3주택 이상은 임대사업 등록을 의무화, 의무 임대기간도 현행 10년에서 25년으로 연장
- ③ 주택양도차익을 생애 1회로 한정, 비과세 양도차액 상한제 도입

(3) 보유세 강화와 조세형평을 통한 가격안정

- ① 종합부동산세 기능 정상화 : 1가구 1주택 종부세 기준액 11억 원을 9억 원으로 월상회복, 토지분 별도합산 종부세 최고세율 1.6%로 인상, 상가와 빌딩, 분리과세 토지 등에도 포괄 적용, 임대사업자 특혜인 합산배제 폐지(사회주택은 예외)
- ② 과표가격 현실화 : 공시지가는 현재 정해진 로드맵에 따라 90%까지 추진,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종부세와 동일하게 폐지
- ③ 고위공직자의 1주택 소유 법제화 : 1주택 이외의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

2) 주거안심정책

(1) 공공주택 20% 달성

- ① 장기공공임대주택 100만호(5%) 토지임대부, 환매조건부 공공자가주택 100만호(5%) 등 10% 신규공급으로 공공주택 비중 총 15%를 달성, 차차기 정부에서 20%로 완성

(2) <세입자 안심임대 시스템> 구축

- ① 횡수 제한 없이 계약 연장이 가능하도록 임차인의 '계속 거주권'을 보장
- ② 임대료 5% 상한제를 모든 계약에 적용(신규계약 포함)
- ③ '무주택자 주거수당'을 중위소득 60%까지 지급
- ④ 최저주거 1인당 면적을 현재 14제곱미터에서 25제곱미터로 상향

(3) '주택 거버넌스' 정책

- ① 도시주택부 신설을 통해 주택정책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구현

- ② 공공주택위원회 설치 : 전문가 및 세입자, 청년, 노년, 아동 양육가구, 장애인 등 당사자 대표 참여
- ③ 준시장형 공기업인 LH공사는 공공주택 공급과 관리를 전담하는 준정부기관인 '공공주택공단'으로 전환
- ④ 기후위기에 맞춰 주택을 개량하는 '그린주거공사'를 설립
- ⑤ 공공주택 재정 확보를 위한 '공공주택특별회계'를 설치
- ⑥ 토지비축은행 설립으로 공공개발을 위한 사전 토지 비축을 활성화
- ⑦ 민간임대주택의 계약과 주거품질을 감독하는 '부동산감독원' 설치

4. 잠재성장률 제고

- 양적인 성장률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의 시스템과 철학을 완전히 바꾸고 기술과 노동, 시장과 사회, 인간과 지구가 공존하는 '신질서'를 수립할 것임.
- 이를 위해서 그린노믹스로 신산업을 육성하여 경제 활력을 되찾을 것이고 50만개 이상의 안정적 녹색일자리를 만들어 지역경제를 부흥시킬 것임. 전통적인 탄소기반 산업이 집중된 동남권, 공업기반이 약한 서남권, 화석발전이 몰려있는 충청권과 강원까지 비수도권 지역들이 한국판 러스트벨트가 되는 위험에서 벗어나 녹색산업으로 거듭나게 하겠음
- 50만개의 일자리 가운데 30만개는 에너지전환투자에서 만들 것임. 광역시도 단위에 지역에너지공사를 설립해 공공, 개인, 협동조합 등 다양한 소유형태의 에너지중소기업 창업을 지원하겠음.
- 10만개 일자리는 그린리모델링 일자리로 만들겠음. 정부가 지원해 매년 20만채씩 20년이 넘는 주택과 건물에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실시해, 탄소배출을 줄이고 주거의 질을 개선하며 고용을 창출할 것입니다. 또한 중고 태양광과 배터리, 석유화학 제품의 해체와 재활용·재사용에 종사하는 지역분산형 중소기업의 창업과 사회적 경제의 활성화도 지원
- 농어업의 생태전환과 농어민기본소득·청년농민 지원은 스마트 그리드 개선사업과 함께 10만개의 녹색일자리를 추가로 만들 것임
- 50만개의 상시적 녹색일자리 이외에도, 지역산업 재건과정에서 환경, 공동체, 돌봄 일자리를 더 발굴해 공공이 지원하는 <지역일자리 보장제>로 100만개의 고용을 창출하겠음

5. 가계부채 문제

- 가계부채의 가장 큰 원인은 부동산 문제임.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서는 부동산문제를 해결 해야함. 이를 위해서 서민주거 안정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칠 것임
- 누구나 살고 싶은 공공주택으로 공공주택 20%를 실현, 담 가능한 임대료로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세입자 안심임대 시스템> 등을 도입할 것임. 또한, 주거기준을 대폭 강화해 청년과 주거 약자들의 지옥고 탈출을 도울 것임. <생애 첫집 프로젝트>로 수도권에 최대 25만호의 공공주택을 공급하여 주거불안을 해소하고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킬 것임
- 현재 DSR 적용에 전세대출, 신용대출 등이 포함되지 않으면서 제대로된 정책의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음. 따라서 예외를 최소화 하는 방식으로 대출제도를 재 정비하여 상환능력중심의 대출심사 관행을 확립하고 부채증가 속도를 관리 할 것임. 더 나아가서는 가계부채를 점진적으로 축소해나가는 것을 정책 목표를 삼을 것임.
- 한편으로는 대출제도의 엄격한 관리로 인하여 저신용자들이 고금리 대출 등의 어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정책금융을 확대하여 포용적인 금융정책을 실현 할 것임.
- 파산회생제도 등을 정비하여 신속하게 구제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경제활동에 빠르게 복귀하고 재기할 수 있는 사회로 만들 것임.
- 리스크를 줄여나갈 계획임

6 소득불평등 문제

- 불평등 극복을 위해선 소득 보장 정책을 펼칠 것임. 소득 보장 정책은 2가지 축으로 구상하였음.
- 하나는 '시장에서의 공정한 분배'가 이루어지도록 시민의 노동권을 강화하는 것임. <일하는 시민을 위한 신노동법>은 시민의 교섭력을 높여 분배를 재조정할 것입니다. 이는 거대 양당의 소득 정책과 저의 가장 큰 차이점 임.

- ‘일하는 시민 모두’가 노동권을 갖도록 할 것임, 비정규직 노동자를 위한 평등수당과 최소노동시간보장제를 도입할 것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서 위해서 ‘성평등임금공시제’와 ‘최고임금법’을 확실히 도입 할 것임.
- 다른 하나는 ‘국가를 통한 소득보장’인 <시민평생소득>임. 이는 정부가 소득보장제도를 도입해 불평등과 빈곤에 대응하는 정치적 대응임. 시민들이 시장 밖에 있건 안에 있건, 어떠한 처지에 있더라도 인간으로서 기본적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국가가 소득을 제공하는 것임.
- 모든 시민에게 <시민최저소득 100만원>을 보장하고 일하는 모든 시민을 위한 <전국민소득보험>을 완성할 것임. 또한, 시민의 사회적 역할을 지원하는 <범주형 기본소득>을 도입할 것임
- 또한, 땅을 이용한 투기 소득도 제2의 토지개혁’ 등을 통해서 근절 할 것임. 이를 위해서 토지초과이득세’를 다시 도입하고, 개발이익환수제도 강화를 통해서 부동산 불로소득을 엄격히 환수 하겠음.

7. 국가부채 문제

국가채무/GDP 비율은 재정건전성을 보여주는 대표 지표이다. 2022년 우리나라 국가채무(D1)는 1064.4조원으로 GDP의 50.0%에 이른다. 다른 나라와의 상대 평가를 위해 도입된 개념이 비영리 공공기관을 포함한 ‘일반정부 부채(D2) 비율’인데, 2019년에 우리나라는 42.1%이고 OECD 평균은 109.5%다. 이 수치로만 보면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OECD 평균은 가중평균이라, 비교를 위하여 단순 산술평균으로 환산하면 81.9%로 크게 낮아진다. 게다가, 우리는 국민연금 보유 국공채 규모가 내부거래로 부채에서 제외되는데, 이는 GDP의 약 8% 수준으로 추산된다. 결국 2019년 국가부채 비율의 우리나라와 OECD 비교는 ‘42 대 110’이 아니라, ‘50 대 82’가 된다. 2025년 D1 비율 전망치는 2017년보다 22.8%p 늘어난 58.8%인데, 이를 D2로 환산하고(+4.5%p) 국민연금 요인을 더하면(+8%p) 71.3%에 달한다. 최근 이처럼 국가부채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것은 심각한 문제로, 이를 막아 재정건전성을 지켜야 한다. 재정건전성은 거시경제 안정의 근간이다. 소규모 개방경제에서 고령화와 통일 등에 대비하고, 외부충격의 안전판을 강화하기 위해 재정건전성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또, 재정건전성은 국가신용도 평가의 중요 요인이다. 재정지출 혜택의 1차 수혜자는 현 세대이므로,

혜택·부담의 세대간 공평성 면에서도 과도한 재정적자는 피해야 한다. 국가부채의 급격한 누증과 그 부작용(이자율 상승, 인플레이션, 국가신용도 하락, 자본유출 등)에 주의해야 한다. 우리가 직면한 문제들은 저출산·양극화 등 구조적 문제로, 재정건전성을 유지해야 이런 문제들에 대처하는 ‘지속적인 재정기능의 작동’이 가능하다.

=> 우리 사회는 저출산·고령화의 문제, 자산의 불균형, 소득의 양극화, 기후위기 등 많은 문제를 지니고 있습니다. 재정은 이러한 문제에 대응해야 하는 역할이 있고, 이것은 재정의 3대 기능인 소득재분배·효율적 자원배분·경제안정(활성화)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공공사회복지 지출 규모는 2019년 기준 GDP 대비 12.2%로 OECD 평균인 20.0%보다 7.8%p 낮습니다. 정부의 재정 지출이 여전히 적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출 구조에서 재정건전성을 강조하다보면 자칫 정부의 역할을 방기하는 결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 경제를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는 반드시 재정이 수반될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귀 학회의 지적처럼 우리나라의 국가부채비율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나치게 높은 부채비율은 국가의 신인도 하락이나, 인플레이션 등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자산과 소득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고,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문제, 기후 위기 대응 등 수많은 재정 지출의 요구가 있는 가운데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찾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재정적자가 미래세대만의 부담이 되는 것도 문제지만, 현재의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미래세대로 이어지게 하지 않는 것도 현 세대의 몫이라고 봅니다.

재정건전성을 강화하는 방안은 재정 지출을 적극적으로 관리하거나, 수입(세입)을 증가시키거나 크게 둘 중의 하나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자원 마련 방안에 대한 논의가 부족한 것에 아쉬움을 느낍니다.

추후 국가 재정건전성을 둘러싼 다양한 논의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재정 지출의 규모를 증가시키는 문제와 이를 감당하기 위한 재원의 조달 방법이나, 국가 부채 규모의 적정성 등에 대한 논의를 통해 재정건전성이 단순한 비율에 대한 논쟁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재정 구조(수입과 지출) 개편에 대한 논의로 발전해 나가길 바랍니다.